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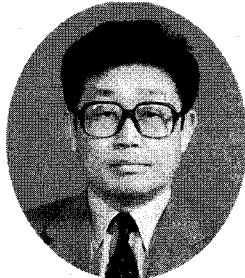
농가부채문제 해결의 조건

정치협상대상 아닌 시장원리대상으로 인식 전환돼야
부채 발생·책임규명하고 대안 제시해야 해결 가능

1997

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들의 평균 부채는 1천9백만원이다. 평균개념(平均概念)이기 때문에 평균에 못미치는 농가는 이보다 적은 빚을, 그리고 평균 이상의 농가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천5백만원 정도는 생활활동을 하기 위해 진 빚이고 나머지 4백만원엔 소비성격인 가계자금으로 사용한 빚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 부채는 자료상으로 보는 한 생산적(生産的) 성격이 강하다.

어떤 이들은 이와같은 농가부채의 생산적 성격만을 보고 농가부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장재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들이 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아무리 생산적이라 하더라도 1천9백만원의 빚은 농가에게는 매우 버거운 짐이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1년동안 농사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겨우 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는 이러한 농가부채를 해결해 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책자금 일부와 상호금융자금 일부

에 대한 상환기한을 2년동안 연장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2%P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농가부채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농가부채의 성격 자체

가 그만큼 복잡하고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문제는 지금까지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핫이슈였다. 그리고 정부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없이 쏟아냈다. 이것은 정부가 농가부채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부채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있지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된다면 농가부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렵고 또 정부의 영원한 짐이 될수 밖에 없다.

‘형평원칙’ 배제된 해결 논의는 논란만 가중

농가부채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를 설정해서 실천해야 한다. 첫째는 이번을 계기로 농가부채 문제를 더 이상의 선거쟁점이나 정치판의 논란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농가들에게 농가부채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닌 시장원리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진 빚도 사업을 하기 위해 진 빚과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 쓴 사람들이 자기책임하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농민들의 농가부채에 대한 생각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빚, 그리고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주는 빚으로 생각해 왔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해결해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한마디로 정부빚은 농민들에게는 눈먼 돈이었고 또 마구 끌어다 써도

되는 빚이었다. 그래서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상환하는 사람들은 바보취급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속성이 농가부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농가부채문제는 형평(衡平)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의 원칙이란 ① 빚을 얻어쓴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와의 형평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농가들의 대부분은 남에게 빚지는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자본을 끌어모아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빚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거나 정부가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써 보자고 생각하는 농민들은 빚을 많이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농가들의 빚을 감면해 준다면 성실하게 살아온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것이고 다른 부채농가들은 이익을 볼 것이다. ② 농가와 비농가간의 형평문제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농가뿐만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부채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 빚만 감면해 주면 비농가들도 가만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농가부채를 경감시켜 줄 경우에는 사업자들도 빚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③ 빚을 이미 갚아버린 농가와 빚을 남기고 있는 농가간의 형평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실한 농가들은 빚을 지더라도 그것을 빨리 갚아 버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상환기일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부 악덕농가들은 반제능력이 있어도 부채상환을 미루어 가면서 부채를 의도적으로 누적시킨다. 이러한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미 빚을

값아버린 성실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정책자금을 빌려쓴 농가와 그렇지 않은 자금을 빌려쓴 농가간의 형평문제이다. 만일 정책자금에게만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이자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은 상호금융자금을 빌려쓴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생산자금이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속성상 용도가 생산적이나 소비적이나 분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소비자금으로 낭비되는 부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정직하게 소비자금으로 일반자금을 빌려쓴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농가부채 문제는 깨끗하게 마무리되기는 커녕 영원한 논란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애매한 정부입장 문제해결에 도움 안되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전제를 지켜가면서 농가부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손상을 주지 않고 농가부채를 해결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농가들이 안고 있는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규모별, 차입처, 정책·비정책별, 그리고 용도별로 농가부채의 성격을 가르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위에서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부채인식을 가지고 부채문제 해결에 뛰어들다가는 농가부채정책은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이미 빚을 갚아버린 농가들에 대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 보상의 형태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부채없는 농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다. 담보액이나 투자액이 부채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농가들의 부채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에서 이들을 퇴출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부가 인수하는 대신에 농가빚을 탕감시켜 주는 방법인 것이다.

끝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 왜 정부가 농가부채를 해결해 주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해결에 개입할 경우 어디까지 정부는 손을 써야 할 것인가 등이다. 지금까지 농가부채는 정부의 농정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농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 조차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러한 논리에서 한발짝도 헤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애매했던 것이다. 이제 정부는 꼼짝없이 부채농가의 불모가 된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념에서 헤어나와야 할 때이다.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농가부채의 발생과 부채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정부가 농가부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채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일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농가부채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번으로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농약정보**